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2014.10.21 | 이은경_새사연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국민연금은 07년 개악으로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국민연금을 40년 납부할 경우) 하지만 평생 근무하는 연수가 40년에 훨씬 못 미치는 27-8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대체율은 25%정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뒤집으면서, 국민연금 +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설계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한 성격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공적 연금의 틀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악의 추진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배경이기 때문이다.

배경

현 공무원 노동조건은 한국사회 전체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공무원 연금 역시 국민연금 + 기초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 모두 한국 사회 변화가 원인으로,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전 국민의 노동조건이 나빠진 것이다.

- 외환위기(IMF) 이후,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자 상대적으로 공무원직의 수준이 올라갔다.
- 국민연금이 개악되고 약속한 기초연금이 망가지면서,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좋은 연금이 되었다.



무엇이 가능한가?

하나는 국민연금의 길을 밟는 방법, “더 내고 덜 받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합해도 소득대체율¹⁾이 30%가 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다. 연금학회의 안대로 지금보다 40% 넘게 더 내고 30% 넘게 덜 받으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락한다. 물론 공무원의 근무 연수가 더 길기 때문에 30%를 약간 상회할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이며,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 복지지출을 현 수준에서 약간만 올린 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방향이다.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계약을 마쳤고 이제 공무원연금, 이후 다른 특수직역 연금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만 현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 07년 국민연금이 계약된 이후, 09년 공무원연금 개편은 신규공무원에게만 “더 내고 덜 받는, 하지만 국민연금 보다는 더 나은” 연금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강력한 공무원사회의 반발과 정부의 수용으로 일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만 좋은 연금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자체를 올리면서 공무원연금을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내용상, 두 번째 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 사회 복지지출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어떤 방향도 쉽지 않다. 공무원사회의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국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걸어온 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후 “공무원연금개편→공공부문 정상화→다른 특수직역연금(군인, 사학연금)의 개편”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즉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며,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 일자리의 임금은 높지만,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빠른 은퇴가 일반적이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과 높은 연금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이 역시 사라지게 된다. 그야말로 바닥을 향한 질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1)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느냐 하는 개념이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 기간(13~17년)은 한국 사회 복지제도에서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가는 본격적 고령사회가 시작되며, 노인인구는 막대한 복지지출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사회 복지지출이 OECD 국가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아직 노인인구가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이고 이미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등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령사회인 OECD 국가들은 연금지출에 GDP의 8~9%를 쓰고 있고, 한국은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인지출의 차이가 복지지출로 표현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고령지출을 통제하는 것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더라도 이 지출을 4~5% 정도에서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다.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은 고령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연금은 한번 설계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제도 개편에 몰두중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한국 사회가 동의한다면? 아니, 동의하지 않더라도 막을 수 없다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 노인들은 평균 소득의 2~3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4~6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주부, 영세자영업자들은 현재 기초연금 20만원 가량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돈의 전부이다.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가 높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은퇴 노인의 대다수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어쩔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권하고 있다. 개인이 열심히 모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왜? 정부는 현재 노인지출 규모를 2배 이상 키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세금을 더 이상 걷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판을 키워야 한다. 복지 재정 총량을 키우지 않고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공무원의 임금과 노후는 공적자금, 즉 재정에 달려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라는 전설속의 화수분 정책을 공약했지만 사실상 서민에 대해 증세하고 있고 복지는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크게는 못 늘리니 고액 연봉자에게 좀 더 걷고, 서민들에게는 좀 더 많이 걷고, 대신 복지는 지금 수준으로 고정해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근본 배경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정확충으로 논의가 넘어가야 하며, 늘어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역시 국민적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원래 세금과 사회보험은 그 사회의 역학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대공황과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의 소득세, 법인세에도 모자라 부유세까지 걷었던 것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역학관계의 추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기울어진 추 덕분에 튼튼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한국의 자산집중은 매우 심하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 열풍이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태인 새사연 前 원장이 밝힌 한국의 피케티 비율, 즉 총 국민소득 대비 자산집중(자본이 가져가는 총량)은 7.5배가 넘는다. 일년 동안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보다 자본의 자산이 7.5배 많다는 말이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 영국도 6배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집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는 복지를 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부를 독점하고 있어서 국가 재정이 부실한 것이다. “고소득과 자산집중으로 인한 부의 증가”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추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세금규모로는 더 이상의 복지확충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복지제도도 유지하기 어렵다. 엄청나게 집중된 부를 연금 개편과 같은 약간의 기술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위에서도 세금을 조금 늘리는 대신, 소비세·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으로 아래, 즉 서민층에서 크게 늘리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도 아래도 크게 늘리지는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채주도성장이고, 부자증세는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은 복지축소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이런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한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야한다. 자산과 소비, 개인소득,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은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조세부담과 복지, 가장 심각한 부의 양극화, 여기에 더해 가장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답이 복지축소라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의 오명을 가진 나라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공적연금을 키우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10월 2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
노동	9/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
복지	10/14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이은경
노동	10/16	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10/20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
복지	10/21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이은경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매주세요.